

베네수엘라의 최근 국내정치 불안 배경과 향후 전망

김진오 구미·유라시아실 미주팀 전문연구원 (jokim@kiep.go.kr, Tel: 3460-1085)

이시은 구미·유라시아실 미주팀 연구원 (suyi@kiep.go.kr, Tel: 3460-1267)

차 례 ● ● ●

1. 베네수엘라의 최근 정국 현황
2. 국내정치 불안의 주요 원인
3. 평가 및 전망

주요 내용 ● ● ●

- ▶ 2014년 연초부터 시작된 야권 급진파의 반정부 시위에 학생과 시민들이 가세하면서 베네수엘라의 정국불안이 장기화되고 있음.
 - 정부의 강경대응과 친정부 및 반정부 세력의 충돌로 희생자는 증가하고 있고 반정부 시위는 야권의 지지 기반인 지방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
 - 그러나 정부·여당과 야당연합 간의 깊은 불신으로 인해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채널은 차단되어 있고 국제적인 중재 노력은 초기단계여서 조기 정국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 정정불안의 배경에는 정치적 갈등뿐만 아니라 악화되고 있는 경제난과 치안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정치적인 근본 요인은 차베스 前 대통령 및 여권연합의 장기 집권에 대한 저항이고, 야권의 지속적인 대선결과(2013. 4) 불복, 지방선거(2013. 12) 패배와 마두로 대통령 집권기반 공고화 견제, 야권 분열 및 주도권 경쟁 등은 시위를 촉발시킨 요인이었음.
 - 경제적으로는 ‘21세기 볼리바르 사회주의’ 경제정책으로 누적되고 글로벌 경기침체로 심화되고 있는 최근 경제난(성장률 둔화, 고물가, 생필품 및 외환 부족 등)이 대정부 시위를 격화시킨 원인임.
 - 사회적으로는 정부의 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 및 대응, 지방분권화에 따른 치안 소홀, 사법제도에 대한 투자 부족, 치안당국 간의 연계 부족 등에 기인한 심각한 치안 불안이 원인으로 작용함.
- ▶ 대화 및 협상 부재로 인한 강경 대립은 정부와 여권에 부담이지만, 폭력시위 장기화에 따른 민심 이반과 반정부 활동 악화로 정부와 여당이 정국안정을 위한 주도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 ▶ 마두로 대통령의 경제정책 방향이 차베스 前 대통령보다 더 강경한 사회주의 모델이어서 경제난은 중단 기적으로 지속될 것이지만, 정국이 조기에 안정될 경우 급격한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1. 베네수엘라의 최근 정국 현황

■ 2014년 들어 시작된 야당연합(민주연합원탁회의, MUD)¹⁾ 급진파의 반정부 시위에 학생 및 시민들의 참여와 친정부 세력과 반정부 세력 간의 충돌로 인해 정국은 위기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음.

- 반정부 세력의 중심지인 대도시 중산층 거주 지역에서 시작된 시위는 전통적인 친정부 세력 거점지역까지 확산되었고, 정부의 강경대응과 반정부 및 친정부 세력 간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장기화됨.

■ 시위를 주도하는 MUD 급진파와 시민들은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면서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의 하야 요구에 이어 국제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중임.

■ 반면, 정부와 집권당(베네수엘라 사회주의연합당, PSUV)²⁾은 차베스(Hugo Chávez, 1999~2013. 3 집권) 前 대통령 축출을 목적으로 발생했던 2002년의 쿠데타처럼 합법적으로 출범한 정부에 대한 파시스트적인 도전으로 평가하고, 시위 초기와는 달리 야권과의 대화채널을 차단한 채 강경대응하고 있음.

- 야당(Voluntad Popular) 지도자인 로페스(Leopoldo López)를 폭력시위를 사주한 혐의로 체포한 데 이어 반정부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고, 사태해결 및 중재에 제3자의 개입을 전면 거부함.
- 단, 미국의 영향력이 높은 미주기구(OAS)를 제외하고 남미지역 정치협의체인 ‘남미국가연합(UNASUR)’ 혹은 ‘미주를 위한 볼리바르국가연합(ALBA)’을 통한 국제적 협의 및 중재는 수용함.

2. 국내정치 불안의 주요 원인

■ 베네수엘라 정정불안의 배경에는 여·야 간의 정치적 갈등뿐만 아니라 악화되고 있는 경제난과 치안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가. 정치적 배경

■ 차베스 前 대통령의 사망(2013. 3. 5) 이후 베네수엘라의 정국은 PSUV의 대선(2013. 4. 14) 및 지방선거(2013.

1) 민주연합원탁회의(MUD: Mesa de la Unidad Democrática)는 2010년 총선에 대비하고 2004년 소환국민투표 실패로 붕괴된 여당연합(Coordinadora Democrática)을 대체하기 위해 2008년 1월 중도파, 중도좌파, 좌파, 중도우파 정당들로 구성된 선거연합체인. 2009년 6월 11개 정당이 참여하면서 재구성된 후 2010년 4월 전국 정당(16개)을 포함한 약 50개의 군소 정당으로 확대됨.

2) 베네수엘라 사회주의연합당(PSUV: Partido Socialista Unido de Venezuela)은 차베스 정당인 제5공화국운동(MVR: Movimiento V República) 주도로 볼리바르혁명을 지지하는 정치세력들로 2006년 대선 승리 직후 창당됨.

12. 8) 승리를 기반으로 안정될 전망이었지만, 야권이 대선결과를 지속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안한 양상을 보여 왔음.

- 대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배하자 MUD의 카프릴레스(Henrique Capriles) 후보와 야권 및 지지자들은 부정 선거 및 개표를 주장하며 선거결과 불복을 선언하고, 수작업을 통한 재검표 요구와 대정부 항의 시위를 지속함.
-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CNE)가 재검표(5. 6 개시)를 통해 마두로의 승리를 재확인(6. 11)했지만, 야권은 독립기관인 CNE 위원(5인) 가운데 4인이 집권당과 연관되어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선거 준비 및 투개표 등에서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함.³⁾
- 이 외에도 야권은 미주인권재판소와 같은 국제기구예의 제소(8. 6)를 주장한 데 이어 최고선거법원(TSJ)에 부정선거 소송을 제기(8. 6 기각)하기도 했음.
- 이러한 지속적인 대선 불복에 야권 지지자들이 결집하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됨.

■ 지방선거 패배와 마두로 정부 집권기반 공고화를 견제할 필요성도 야권이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는 배경으로 작용함.

- 지방선거 패배는 야권에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대정부 투쟁의 무용론을 확산시키고, 공고화되는 마두로 대통령 및 여당의 집권기반을 견제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됨.
- MUD는 통치 경험이 부족하고 집권체제도 공고하지 못한 마두로 대통령을 상대한 지방선거에서 조차 승리하지 못했기에 차기 대선에서의 승리 가능성도 낮게 판단한 것으로 보임.
- 또한 2015년 예정된 의회선거 때까지 선거를 통한 정권심판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마두로 대통령의 집권기반 공고화에 전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힘을 얻은 것으로 판단됨.
- 이에 MUD 급진파가 마두로 대통령의 축출을 의미하는 ‘La Salida(Exit)’ 전략으로 학생과 시민을 반정부 시위로 유도했다는 평가를 받음.⁴⁾
- 실질적으로 마두로 대통령은 지방선거 직전인 2013년 11월 20일 의회가 승인한 수권법(12개월 유효)⁵⁾을 활용해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통치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 한편, 야권 분열과 지도자들의 주도권 경쟁도 반정부 시위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 MUD는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에서 연이어 패배하면서 반정부 시위, 선거 보이콧, 파업, 쿠데타 등과 같은

3) EIU(2014. 2. 26), "What next for Maduro?"

4) Ibid.

5) 수권법(La Ley Habilitación)은 행정부에 광범위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법률로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음. 차베스 대통령 집권기에 4회 수권법이 승인되어 경제, 금융, 세제, 토지, 기업, 자원, 가격, 국유화 등 다양한 주제와 관련한 총 215개 법률이 제정된 바 있음. 마두로 대통령의 수권법 신청 목적은 국가조직 내부의 부패척결, 상품과 서비스 가격 인하, 전체 경제부문의 마진율(15~30%) 제한 등의 정책을 통해 국가 전체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음. 실질적으로 수권법 승인 직후 마두로 대통령은 가격·비용·마진 통제법, 상업건물 임대료법, 차량가격인하법, 대외무역센터설립법 등을 제정함, "Maduro aprobó dos leyes para proteger derechos económicos(2013. 11. 22)," *El Nacional*.

직접적인 행동으로 정권을 교체하려는 급진파와 선거 및 소환국민투표 등 합법적인 절차를 우선하는 온건파 간에 분열되어 왔음.

- MUD는 2012년과 2013년에 연속으로 대선 후보가 되면서 지도력이 급상승한 온건파이면서 당대표인 카프릴레스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음.
- 그러나 온건파와 급진파 간의 관계는 대선 예비경선 후보였던 마차도(Marí a Corina Machado)와 로페스 등 주요 인사들이 합법적인 대정부 투쟁 노선을 두고 야당연합 지도부와 대립하면서 악화됨.⁶⁾
 - * 마차도, 로페스, 레데스마(Antonio Ledezma, 카라카스 시장) 등이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고 있음.
- 특히 2012년 주지사 및 시장선거에 출마할 정당후보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카프릴레스의 정당(Primero Justicia)과 로페스의 정당(Voluntad Popular) 간의 갈등과 최근 시위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마련한 전국치안회의에 참여한 카프릴레스에 대한 로페스 및 마차도의 비난은 MUD의 분열을 가속화시킴.
- 여기에 2월 12일의 대규모 시위 직후 온건파가 “로페스의 ‘La Salida’ 전략이 분열되고 비민주적인 야당의 모습을 정부와 국민에게 인식시키는 비생산적인 연극에 불과하다”고 비판⁷⁾함으로써 분열된 모습을 재확인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경대응이 지속되자 카프릴레스를 비롯한 온건파가 평화적인 반정부 시위 지지를 선언하고 2월 26일로 예정되었던 정부와의 협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분열된 야권을 다시 통합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함.
- 이와 같은 카프릴레스의 반정부 시위 지지 선언의 배경에는 강경파의 압력을 수용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가 마련한 치안회의 참여로 악화된 온건파⁸⁾의 당내 기반을 회복하려는 목적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나. 경제적 배경

■ 사회주의 모델을 지향하는 경제정책(국유화, 외환 및 가격통제, 포퓰리즘에 입각한 재정 및 통화 팽창)에서 비롯된 베네수엘라의 최근 경제난(성장을 둔화, 고물가, 평가절하 압력, 생필품 부족 등)도 시위사태를 악화시킨 원인으로 판단됨.

■ 고유가에 힘입어 2000년 초반 고성장을 기록했던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전반적인 둔화세를 보임.

- 베네수엘라 경제는 고유가를 바탕으로 2000~06년 평균 4.1% 성장했지만, 세계경제위기 및 국제유가 하락으로 2009~10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 2011~12년 소비 및 투자증가를 바탕으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2013년에는 유가안정에도 불구하고 투자 급감과 수출 감소 영향으로 1.6% 성장한 것으로 추정됨.

6) Oxford Analytica(2014. 2. 14), “Opposition fractures may aid Venezuela's Madu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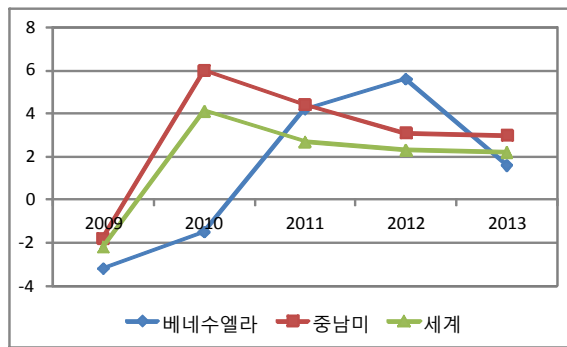
7) Ibid.

8) 전국치안회의에 참석한 주요 온건파 정치인은 Pedro Pablo Fernández 의원(기독교민주당 Copei 前 대통령 후보 Eduardo Fernández 아들), Miguel Cocchiola(카라보보 州都 Valencia 시장 겸 사업가), Lorenzo Mendoza(식품가공업 Empresas Polar 대표), Jorge Roig(상공회의소 Fedecamara 회장), Henry Falcón(라라 주지사, 前 MVR 소속 정치인) 등임.

- 성장률은 국가경제가 GDP의 20%, 수출의 90%, 재정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국제유가의 변동에 민감함(그림 2 참고).

그림 1. 실질 GDP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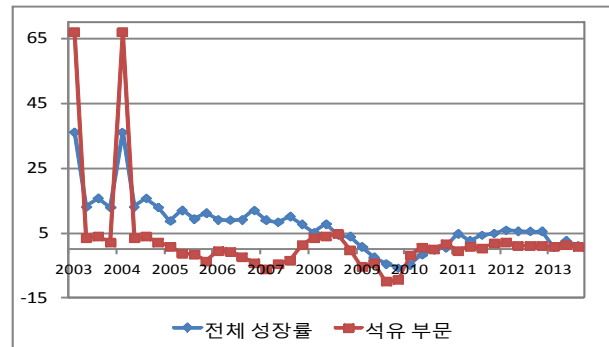
(단위: %)



주: 2013년은 EIU 추정치.
자료: EIU, Country Report.

그림 2. 경제활동부문별 분기별 성장률 추이

(단위: %)



자료: 베네수엘라 중앙은행(Banco Central de Venezuela).

표 1. GDP 구성요소 추이

(단위: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GDP 증가율	-3.2	-1.5	4.2	5.6	1.6
민간소비 증가율	-2.9	-1.9	4.0	7.0	4.0
정부지출 증가율	1.5	2.1	5.9	6.3	2.6
총고정투자 증가율	-8.3	-6.3	4.4	23.3	-9.2
상품 및 서비스 수출증가율	-13.7	-12.9	4.7	1.6	-7.7
상품 및 서비스 수입증가율	-19.6	-2.9	15.4	24.4	-9.5

주: * EIU 추정치.
자료: EIU, Country Report.

■ 이에 정부는 고정환율제도, 외환 및 자본통제를 통해 석유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려 함.

- 차베스 前 대통령은 외환보유고나 물가 등 국내경제에 미치는 석유산업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고정환율제도를 도입하고 엄격한 외환 및 자본통제를 실시함.
- 2003년 대통령령을 통해 ‘외환관리위원회(Comisión de Administración de Divisas—Cadivi)’를 설치하고 개인의 달러 매입, 법인의 달러 송금, 재화나 서비스의 수입 결제를 통제함.
- 외환통제 결과 2012년 Cadivi가 허용한 민간의 달러 매입액은 331억 달러에 불과하였고, 이 가운데 181억 달러가 수입대금 결제에 사용되었음.

■ 외환통제 강화는 비공식시장의 달러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환율상승 압력으로 작용함.

- 공식 환율은 달러당 6.3BsF이지만 비공식시장 환율은 10배를 상회하는 75BsF로 형성되어 있음.
- 비공식 환율의 상승은 해외송금이나 해외관광 등을 위장한 내국인의 환전이 급증한 결과로 판단되는데, 중앙

은행은 2012년에만 그 규모가 20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함.

- 외환수요 증가와 함께 환율상승 압력이 지속되자 중앙은행은 2013년에 관광객, 석유공사(PDVSA)를 포함하는 '민간 거래용' 달러 환율을 경매를 통해 결정하는 이중환율제도(SICAD, 기준환율 11.7BsF)를 도입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2014년 3월 11일 SICAD II를 도입하여 공식 환율을 추가로 조정함.

■ 외환통제와 함께 정부의 팽창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은 유동성 과다 문제를 야기하고, 고물가로 이어졌음.

- 대선을 앞둔 2012년부터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한 바, 2014년 2월 기준 물가상승률(연율)은 56%에 달함(그림 3 참고).

표 2. 재정 지표 추이

(단위: GDP 대비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NFPS** 수입 비중	24.8	21.3	27.9	28.7	27.9
NFPS 지출 비중	32.7	31.6	39.5	43.3	38.3
NFPS 수지 비중	-7.9	-10.3	-11.5	-14.6	-10.4
순 공공부채 비중	36.4	36.6	50.1	53.0	5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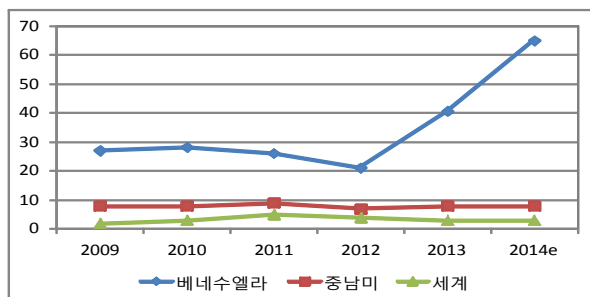
주: * EIU 추정치(베네수엘라는 2012년부터 NFPS 재정 지표를 발표하지 않음), **비금융공공부문.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EIU Country Report에서 재인용.

- 막대한 석유수출 수익은 정치적 목적의 재정정책 운용⁹⁾은 물론 산업 및 세원 다각화를 저해하고, 고정환율제도 하에서 볼리바르화를 고평가시키는 원인이었음.
- M1 규모는 10년 전에 비해 63배 증가(멕시코 5배, 브라질 3배 미만)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4 참고).

그림 3.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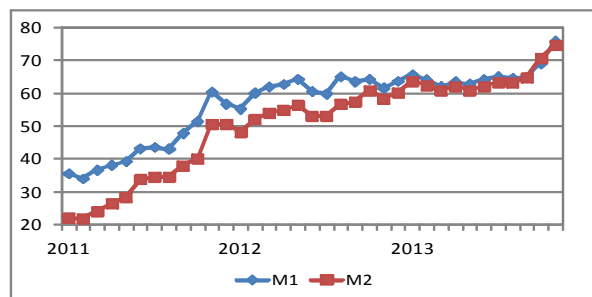
(단위: %)



자료: EIU, Country Report.

그림 4. 전기대비 월별 통화량 변화율

(단위: %)



자료: EIU, Country Report.

9) 베네수엘라의 재정수입 예산은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전망한 석유수출가격(예: 실질 연평균 유가 배럴당 100달러, 예산편성기준 60달러)을 기초로 편성됨으로써 정부가 정치적 필요에 따라 방만한 예산의 지출을 가능케 함. 따라서 재정수지 적자는 석유수출에서 발생하는 추가 수익으로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2012년부터 공식 재정 통계가 발표되지 않아 분석에는 한계가 있음. EIU, Global Insight 등에 따르면 2012~13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11%~-14%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 외환통제에 따른 수입 제한, 높은 물가상승률 및 가격통제는 소비재, 식품, 의약품 등 생필품 부족을 심화시킴.

- 베네수엘라는 생필품 및 내구성 소비재의 대부분을 수입¹⁰⁾에 의존하고 있는데, 식료품과 생필품 공급 부족은 민생안정을 위협하면서 사회불안 요인으로 비화됨.
- 외환공급 부족에 따른 자본재 및 원부자재 수입 제한은 경제활동을 제약함.

■ 한편 엄격한 외환통제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 축소, 석유수출대금 감소, 외국인투자 유출 등으로 외환보유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함.(2008년 423억 달러 → 2012년 299억 달러 → 2013년 215억 달러)

- 석유수출(2013년 200~220억 달러 추정)을 기반으로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흑자규모는 무역수지 흑자 감소와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 적자 증가로 2011년 GDP 대비 7.7%(244억 달러)에서 2013년 2.1%(78억 달러, 추정치)로 감소 추세임.
- 석유수출의 경우 구상무역(상품 및 서비스와의 교환)에 활용되거나 차관을 석유로 상환(loan for oil)함으로써 외화 유입액 감소의 원인이 됨.
- 또한 외환보유고의 72%를 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점도 외환보유고 감소(금 가격 하락) 원인으로 작용함.
- 외환통제와 국유화정책 강화는 외국인 신규투자 감소 및 기존 투자 철수를 초래함으로써 자본 및 금융 수지 악화의 원인이 됨.

표 3. 주요 거시경제(대외부문) 지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09	2010	2011	2012	2013
경상수지 ¹⁾	2,258	8,810	24,387	11,016	7,484
무역수지 ¹⁾	16,434	27,234	46,026	38,031	27,463
서비스수지 ¹⁾	-9,972	-11,225	-13,775	-15,989	-11,891
소득수지 ¹⁾	-4,204	-7,199	-7,914	-11,026	-8,088
금융수지 ¹⁾	-9,840	-13,585	-24,755	-8,679	-9,627
대외투자포지션(IIP, 순)	122,622	123,718	150,910	145,679	149,010 ³⁾
총외환보유고	35,000	29,500	29,889	29,887	21,478
외환보유고(금제외)	21,703	13,137	9,930	9,900	6,038
금보유액	13,297	16,363	19,959	19,987	15,440
금 보유 비중	38%	55%	67%	67%	72%
총외채(10억 달러) ²⁾	61	65	70	72 ⁴⁾	68 ⁴⁾
GDP대비 %	18.6	16.5	22.2	18.9 ⁴⁾	18.4 ⁴⁾
외환보유고 대비 %	174.3	220.3	234.2	240.9 ⁴⁾	316.6 ⁴⁾
단기외채	18,915	20,660	19,110	19,392	n, a
총외채 대비 %	31.0	31.8	27.3	26.9	n, a
외환보유고 대비 %	54.0	70.0	63.9	64.9	n, a

주: 1) 2013년은 1~9월 기준, 2) EIU 자료, 3) 9월 말 기준, 4) 추정치.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 EIU Views Wire.

10) 주요 수입상대국은 미국(44.6%), 콜롬비아(23.6%), 브라질(12.8%), 멕시코(5.4%) 등임.

다. 사회적 배경: 치안 불안

■ 차베스 집권 이후 악화된 치안 불안도 반정부 시위 발생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함.

- NGO인 베네수엘라폭력감시단체(OVV, Observatorio Venezolano de Violencia)에 따르면 2013년에 인구 10만 명당 79명(2012년 73명)에 해당하는 24,763명(2012년 21,692명)이 살해되어 세계 3위를 기록함.¹¹⁾
- 특히 차베스의 13년 재임 기간 동안 살인범죄 희생자 수는 1998년 4,550명(10만 명당 19명)에서 급증하고, 납치사건 건수는 20배 이상 증가한 것이어서 치안상황이 매우 불안해졌음을 알 수 있음.

■ 치안 불안이 심화된 주요 원인으로는 차베스 정부의 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 및 대응, 지방분권화에 따른 치안 소홀, 사법제도에 대한 투자 부족, 치안당국 간의 연계 부족 등을 들 수 있음.

- 범죄와 폭력을 빈곤과 불평등의 산물로 인식했던 차베스 정부는 급진적인 사회정책을 바탕으로 2000년대 들어 중남미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했음.
- 그러나 이후 그러한 인식을 전환하지 못하여 증가하는 살인을 문제와 일상화된 치안 불안 해결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지 못했음.
- 1990년대 초에 이루어진 지방분권화 과정에서 치안도 지방정부가 담당하게 되나, 지방정부는 부족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사법기관의 부패로 인하여 악화되는 치안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함.
- 사회부문에 대한 대규모 재정 투입과는 달리 검찰은 물론 법원, 교도소, 보호관찰과 같은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투자는 부족하였고, 이들 서비스에 만연된 부패, 오남용, 비효율성은 증가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이었음.
- 차베스 재임 기간 동안 내무장관이 11회 교체되고 내무부가 주도한 국가치안전략만 21회 발표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치안 당국 간의 연계성과 정책의 지속성 부족도 원인으로 작용함.

■ 이러한 가운데 재임 1년이 지나지 않은 마두로 행정부에 치안불안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지만, 차베스 정권을 계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이러한 문제제기를 반영하듯이 마두로 대통령은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기 직전까지도 차베스보다 더 적극적으로 불안한 치안상황을 인지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치안관련 부처 및 기관 인사 단행,¹²⁾ 전국 치안회의 개최 및 ‘국가평화계획’¹³⁾ 수립, 군대 활용,¹⁴⁾ 재원 확충 및 법률 제정¹⁵⁾ 등을 통해 노력해 왔음.¹⁶⁾

11) 반면, 정부는 2013년 살인율이 2012년 인구 10만 명당 54명(16,072명)에서 39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발표함. “OVV: 24,763 muertes violentas se registraron en 2013,” *Ultimas Noticias*(2013. 12. 26); “Venezuela rechaza reporte de la OVV, dice que decayó la violencia,” *El Nuevo Herald Venezuela*(2013. 12. 28)

12) 취임 직후 정보기관, 군정보기관, 대통령 경호대, 경찰청(PND), 경찰학교(UNES) 등 주요 치안 책임기관들의 수장들을 교체하고, 민생안정과 관련한 부처 간의 협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내각(교육, 청소년, 노동, 산업부 장관)을 개편함.

13) 전국치안회의를 기초로 발표(2014. 2. 14)된 국가평화계획(Plan de Pacificación y Convivencia Nacional) 10대 전략의 목표는

■ 마두로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응은 치안 불안이 야권에 의해 정치 쟁점화되고 민심 이반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었음.

- 마두로 행정부 치안정책의 최대 수혜지역은 범죄율이 높은 술리아 및 미란다 주인데, 전통적으로 야당세가 강한 지역임.

3. 평가 및 전망

■ 정치적 대화 및 협상 창구가 부재한 가운데 격화되는 반정부 시위, 정부의 강경대응 입장, 그리고 친정부 대 반정부 지지세력 간의 폭력을 동반한 충돌이 지속되고 있어 베네수엘라 정국의 조기 안정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반정부 시위의 장기화와 야권 급진파의 대화 및 협상 거부 등은 민심 이반을 초래하여 반정부 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이 경우 분열된 야권에서는 온건파가 정부와의 대화와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마두로 대통령과 여당은 사태해결의 주도권을 행사하여 위기정국을 돌파하고 집권기반을 공고화시킬 것임.
- 실제로 지난 3월 15일 카프릴레스와 야권 온건파는 위기정국을 논의할 대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접촉하고 있다고 발표함.

■ 대화와 협상을 주문하는 중남미지역의 여론과 정부의 강력한 역외세력 개입 차단 노력은 정부 주도의 해결 가능성을 제고시킴.

- OAS는 비공개 회의(3. 7)에서 베네수엘라에 감시단을 파견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 불간섭 의지를 표명하였음.
- 반면, 칠레 바첼렛(Michelle Bachelet) 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3월 11일 개최된 UNASUR 정상회의에서는 베네수엘라 사태를 분석하고 중재할 위원회를 4월초에 구성할 계획이어서 UNASUR를 중재기구로 선호해온 마두로 대통령과 여당은 이를 수용할 전망이다.

범죄단체 무장해제를 통한 시민 안전 확보 및 범죄와의 전쟁임 ; Correo del Orinoco, "Presidente Maduro lanza Plan de Pacificacion y Convivencia con 10 lineas de accion(2014. 2. 14)."

14) 2013년 9월에는 부통령과 내무장관의 제안을 수용하여 'Plan de Seguridad Patria Segura(Safe Homeland Security Plan)'의 일환으로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군 병력을 투입하여 치안 유지에 노력함.

15) 경찰 훈련 및 치우개선에 활용할 재원으로 170만 달러를 마련하여 폭력범죄율이 높은 79개 지자체에 제공하고, 2013년 중반에 마련되었지만 연기되고 있는 무장해제법안의 의회 승인에 박차를 가할 예정임.

16) Oxford Analytica(2014. 1. 13), "Venezuelan cross-party crime consensus may not endure."

■ 여권의 정치적 부담과 마두로 대통령의 통치기반 공고화를 감안하면 집권당 내부로부터의 정권 교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비록 PSUV가 차베스 집권기와는 달리 내부적으로 다소 분열되어 있고 시위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강경 대응을 비판하는 정치인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현 정국 상황에서 정권을 재창출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마두로 대통령 하야를 시도할 가능성은 없음.
- 또한 수권법 승인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집권당에 대한 마두로 대통령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함.

■ 한편 마두로 행정부에서는 '21세기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국가주도 경제정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어서 차베스 집권기부터 구조화된 경제난(저성장, 고물가, 고환율, 생필품 부족 등)은 중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 최근 물가억제, 통화관리 등을 위한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이 이를 반영함.
- 2014년 1월 제정된 공정가격법안(Ley de Costos y Precios Justos)을 기초로 소매상의 과도한 가격인상을 관리하는 기구가 설치되었으나, 생필품 공급난은 심화되고 경제활동은 더욱 침체됨.
- 또한 2013년 말 중앙은행의 금리인상(12.5% → 16%)에도 여전히 실질이자율이 마이너스 상태여서 통화량 통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비정통(unorthodox) 경제정책을 유지하는 한 베네수엘라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지만, 현재의 국제수지, 총외채 및 단기외채 수준, 대외투자포지션(IIP), 그리고 고유가 지속 전망을 감안할 경우 단기적으로 급격한 경제(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마두로 행정부의 적극적인 치안안정 대책은 야권을 견제함은 물론 불안한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정부가 치안안정 대책에 야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이유는 야권도 악화된 치안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¹⁷⁾ 동시에 사회 안정과 정치적 대화를 연계시킴으로써 야권 분열을 촉진하고 반정부 시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임. KIEP

17)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범죄율이 높은 주요 지방정부의 경우 정부의 경찰 중앙집권화 시도에 반대함은 물론 치안 및 무장해제계획에도 참여하지 않았음.